

월요광장

지금 유출과 지역화폐



이 상 민
광주대학교수

연초가 되면 많은 기관에서 새해를 전망한다. 영국 The Economist 잡지가 예측한 2015년 세계적 10대 경제 토픽 중 첫 번째는 미국이 석유 생산국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었다. 셰일가스 생산 증가 때문인데, 그 1위의 자리는 205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유가하락 기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 IMF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위협적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

을 상회하여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지역경제 및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득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올린 소득 중의 많은 부분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낙후된 지역경제 영역에서, 그리고 정책수단이 제한된 지방에서 지역주민 생활고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은 더욱 발견하기가 힘들다.

한 가지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의 유출을 막아 주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화폐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총소득(GRI)보다 많은 지역, 즉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많은 지역은 9개 시·도 정도다. 그 중 1위가 충남으로 24조 원 이상의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전남인데, 지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인 16조~18조 원이 매년 역외로 유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남의 1인당

GRDP는 지자체 중 3위이지만 1인당 GRI는 하위그룹에 속한다. 주요 유출창구로는 대기업 이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생산활동의 확보도 어려운데, 여기서 발생한 지역소득을 외부에 빼앗긴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바로 주민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 유출을 막아 지역의 경제적인 자립에도 기여하고, 사람들의 상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지역화폐 발행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작업은 용이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역의 결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은행을 설립하여, 그 지역 내에서 유통하는 통화의 발행권을 갖고, 지역 밖의 광역에서 통용되는 통화와 교환한다. 지역에서 일어난다 경제활동의 필요에 따라 교환비율이나 한도금액을 정한다.

지역통화는 유통하는 지역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통화의 공급 및

관리가 용이하고, 부의 극단적 편중과 화폐 순환의 정제도 극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며, 지역 자원의 내부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로 가능할 수 있다. 또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등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1983년 캐나다 코복스밸리라는 섬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공동체 재생운동의 일환으로 한밭레츠와 서천레츠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 연간 지역자금 유출 규모가 4억 원 정도인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역화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다.

화폐는 순환이 잘 될수록 소득을 증가시킨다. 유가하락 등이 일단 가계소득 증대를 가져오지만, 증가된 소득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등과 결합되어 지역구매력을 증대시켜야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계의 소득증대 및 부채감소로 연결된다.

미국 저술가 찰스 아이젠스테인은 돈을 절약한 것으로 보는 대신에 돈이 선물·기부·공유·나눔 등 착한 행동을 촉진하는 측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화폐가 바로 돈을 속된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社說

J프로젝트 성패 국가 지원에 달렸다

영양·해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브랜드명 솔라시도) 사업이 부지하세월이다. 추진 10년이 다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에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외부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야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고 기존 사업자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다.

J프로젝트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 부처가 지난 2005년 국가사업 추진에 합의, 특별법까지 제정해 2025년까지 1조86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호·구성·삼포지구에 골프장, 레저단지, 신재생 및 바이오, 호텔, 카지노, 마리나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F1경기장이 세워지고 일부 도로 개설과 45층 골프장 착공이 전부다.

전직이 이 정도뿐인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J프로젝트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 부처가 지난 2005년 국가사업 추진에 합의, 특별법까지 제정해 2025년까지 1조86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호·구성·삼포지구에 골프장, 레저단지, 신재생 및 바이오, 호텔, 카지노, 마리나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F1경기장이 세워지고 일부 도로 개설과 45층 골프장 착공이 전부다.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던 만큼 투자 유치를 위해 전남도가 사활을 걸었지만 그마저 여의지 않았다.

최근 전남도는 사업자들이 재정난으로 자본 수혈이 필요하자 매립된 공유수면을 토지로서 보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부정적이라고 한다. 현 제도하에서 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요청은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다. 예산의 직접 지원도 야간대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은 지금껏 보여준 또 다른 행태의 비호조다. 또한 이미 준공됐거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총주 등 3곳의 다른 기업도시와 경쟁성에도 문제가 있다.

J프로젝트는 결코 지역사업이 아니다. 중국과 가까운 서남해안 개발은 새로운 생산과 소득을 유발하는 국가의 미래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의 외면과 정부 기관의 지원 부족에 전담도의 추진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물지각한 광주시 간부공무원들의 작태

광주시 일부 간부공무원의 막말과 성희롱 발언 등 업무태도가 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다. 또 모 간부는 의회 업무보고 자료 누락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일하지 말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다른 간부는 업무 관련 거짓말을 했다

가 들들나 망신까지 당했다.

최근 민원 격무부서를 새로 맡게 된 A과장의 하루는 막말로 시작해 막말로 끝나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A과장은 수시로 내부서류 양식과 문구 등을 놓고 직원들에게 막말은 물론 민원인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달 대규모 승진·전보 이후 각 실·국·과별로 회식이 잦아지면서 일부 간부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 국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C국장은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을 은밀히 지시하고 D국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산하기관 외부인사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거둬내고 자료 누락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일하지 말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다른 간부는 업무 관련 거짓말을 했다

가 들들나 망신까지 당했다.

최근 민원 격무부서를 새로 맡게 된 A과장의 하루는 막말로 시작해 막말로 끝나는 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A과장은 수시로 내부서류 양식과 문구 등을 놓고 직원들에게 막말은 물론 민원인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달 대규모 승진·전보 이후 각 실·국·과별로 회식이 잦아지면서 일부 간부는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한 국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C국장은 의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일부 업무에

법조칼럼

시골 판사



한 지 형
광주지법 판사(공보담당)

우리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어떤 일을 잘 하고 잘 하지 못하고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시선이 생겼을까? 판사가 된 이후 서울에서만 근무하다가 이곳에 온 지 3년이 지난 입장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지방 법원에서 기획·공보 업무를 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질 법한 일들도 자꾸만 우리 지역 구청원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곤 하는 것을 보면서는 더욱 의문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방에 대한 편견인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유사한 일도 다른 지역에서 생겼을 때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겼을 때 그와 같은 경향이 더 심한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모를 일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민 끝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 자체의 '부족한 칭찬'과 '과한 비난'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보았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잘 된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포장이 되고 잘 못 된 부분은 어떻게든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적절히 마무리되기도 하던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았다.

우리 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릴만한 일들은 스스로의 홍보 부족, 주변의 칭찬 부족으로 사장되고 좋지 않은 일은 지역 내부에서 과도하게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니 굵지 못한 시선이 늘어나지 않을 리 없는 것이다.

서울의 시선을 맞고있을 일도, "그러려니"하며 가만히 있을 일도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은 발굴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이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지역민 모두가 주변에서 서로 도와야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칭찬에 인색할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박수도 보내고 위로도 해 주면 좋겠다. 지역 언론 역시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저력을 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기술여 주면 좋겠다. 무엇보다 서울과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그래서 또다시 굵지 못한 시선을 받게 될 때 정말로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뒤떨어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상 합리적인 다름'인 경우라 면 많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싶다.

향판(鄕判)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지역법관'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시골 판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그 제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 사고를 계기로 여러 장점으로 불구하고 사라지게 된 것이다. 분명 법원에서 잘못된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홍보의 부족과 기존의 편견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 우리 지역 법조,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손가락질로까지 이어진 것이 꼭 서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을까?

글의 끝자락에, 제도 변경의 시점에 법원을 떠나시거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옮기시게 된 시골 판사님들께 광주를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서 존경을 담아 박수를 보낸다.

기고

저출산 극복,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나서야



신 현 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기를 맞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은 그나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전국 1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52명을 기록하였지만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 위기는 크다 할 것이다. 이 수치는 OECD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74명보다 낮으며 여전히 인구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인 2.1명(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일정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1%)에 진입한 유일한 도이기도 하다.

저출산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1970년대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의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주거비, 육아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등이 연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신조어인 '삼포시대(연애, 결혼, 출산)'란 말도 생겨났다고 한다. 저출산이 향후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성 둔화,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져 큰 사회적 문제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을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 인구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는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 발굴을 지속해 가고 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내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3개소와 외래산부인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8년까지 공공형 산후조리원 4개소를 확충하는 등 출산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최근 1호점을 해남 시 구소로 생산성 둔화, 소비위축 등으로

위기 조성을 위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행복카드제 운영,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201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복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으로 복지수준을 강화하는 정부차원의 정책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정부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고용, 복지, 교육, 경제 등이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직장, 지역 사회 공동체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참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위에 함께 하는 기금 당사자를 배려하는 문화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진정 축복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전쟁이 터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힘없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특히 여성들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공포와 극심한 고통 외에도 난폭한 점령군들에게 끌려가 말 못할 고초를 겪었다. 또,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층의 고통을 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일본과 청나라에 끌려갔다 가 절개를 잃고 돌아온 한향녀(還鄕女)다. 이들은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무능한 위정자의 통치기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온갖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한향녀들은 정절을 잃었다는 이유로 남편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았다.

선조는 애남들에게 고향땅에 임신했거나 일본에 끌려갔다 돌아온 한향녀들에게 '이태원'에서 모여 살도록 조치했지만, 이들은 정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이어진 병자호란 때는 무려 50여만 명의 여성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호란이 끝난 뒤 이들은 한향녀가 고향에 돌아오자 남편들이 집단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졌다.

당시 인조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성들이 홍제원(지금의 연신내) 냇물에서 몸을 씻으면 청나라에서 저지른 '죄'를 불문에 붙인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 한향녀와의 이혼은 요구대로 안 된다며,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는 첩을 들 것을 권했다.

나라를 지키지도, 자기 가족을 지키지도 못한 무력한 남성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이들 한향녀를 오히려 '화냥년'이라 부르며 천시했다.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단지 여성이라는 까닭으로 그리고 무능한 위정자의 통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된 채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한향녀의 삶은 오늘날 일본군 위안부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다행인 것은 한국 사회가 우리의 딸, 누이, 어머니인 그들의 신산(辛勤)한 삶을 보듬으려하고, 또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죄다. 너무도 소중한, 그리고 반드시 지켜줘야 할 우리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홍행기 경제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광 고 매 케 링 부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 F A X 227-9500 >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 로 그 램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